

##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윤경자\*\*

본 연구는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들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의 광역시도 중 가장 최저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은 만혼 및 임신의 고령화, 혼인율 감소, 높은 이혼율,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현상,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맞벌이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분담참여, 낮은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높은 낙태율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학적 요인들과 가족정책, 자녀양육시설의 이용가능성, 교육비 및 사회와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과 같은 보다 광의의 특성들 때문에 낮게 나타난다. 부산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사회 환경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았는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전국평균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이 요인들의 시사점들과 가족친화적 정책제안들도 8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핵심단어: 저출산, 가족친화환경, 양성평등, 성역할태도, 가족정책

### I. 서론 및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 확산 흐름에서도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인 1.19명을 기록하고 있다(WHO, 세계보건통계 2009, 한국일보 재인용).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체인구율을 상회하는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면서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기가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에 힘입어 이제는 대체인구율보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추세라는 점이며 지나치게 높은

\* This work was supported by Dong-eui University Grant(2007AA138).

\*\*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 gjyoon@deu.ac.kr

출산율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큼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도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1.19명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초저수준의 출산율은 사회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인구의 감소와 미래 세대에게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사회적 부담을 과도하게 지게 함으로써 차후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시대별로 나타난 출산표어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의 '덮어놓고 낳고 보면 거지꼴을 못뵈한다', 1970년대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의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2004년의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등으로 7,80년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출산장려로 바뀌었고 이제는 '출산이 애국이다'로 국가적 우선과제로 바뀌었다. 만혼과 높은 이혼율, 만혼이면서도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세대들의 등장, 동거커플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현상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초저출산은 21세기의 주요 위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저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소수의 특정 정책보다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문화적 개선책을 다각도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1> 시도별 합계출산율

행정구역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국	4.01	2.84	2.14	1.60	1.72	1.51	1.26	1.13	1.16
서울특별시	3.05	2.28	1.77	1.52	1.61	1.29	1.07	0.97	1.0
부산광역시	3.38	2.53	1.92	1.48	1.55	1.26	1.04	0.91	0.94
대구광역시	-	-	1.91	1.43	1.65	1.41	1.16	1.01	1.02
인천광역시	-	-	2.05	1.61	1.89	1.53	1.26	1.1	1.12
광주광역시	-	-	-	1.52	1.89	1.64	1.34	1.14	1.15
대전광역시	-	-	-	1.52	1.82	1.55	1.28	1.14	1.15
울산광역시	-	-	-	-	-	1.68	1.35	1.22	1.21
경기도	3.80	2.85	2.25	1.73	1.89	1.69	1.38	1.22	1.22
강원도	4.46	3.25	2.39	1.62	1.61	1.56	1.36	1.19	1.2
충청북도	4.41	3.2	2.43	1.65	1.74	1.62	1.35	1.22	1.22
충청남도	4.49	3.29	2.45	1.66	1.63	1.69	1.44	1.31	1.32
전라북도	4.96	3.47	2.55	1.64	1.68	1.61	1.35	1.2	1.21
전라남도	4.76	3.61	2.65	1.79	1.72	1.74	1.47	1.32	1.32
경상북도	3.94	2.88	2.46	1.74	1.64	1.56	1.32	1.19	1.19
경상남도	4.1	3.05	2.38	1.66	1.81	1.58	1.35	1.22	1.22
제주도	4.73	3.31	2.49	1.49	1.83	1.74	1.49	1.34	1.36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본 연구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전국광역시·도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출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가족친화환경 조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은 광역시·도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아주 낮아서 1990년 1.55명을 기록한 후 이후 2002년 0.96명, 2007년 1.02명으로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도 지속적으로 전국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통계청에서 합계출산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전국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없으며 1990년부터는 서울특별시보다도 더 낮은 출산율로서 지속적으로 전국 최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하여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부산가족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매우 필요하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출산율 감소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난 서구에서도 출산율 감소에 관한 사회적 현상과 문제점 및 요인분석, 혹은 대책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출산율 감소에 관한 인구학적인 이론들을 보면 고전적 인구학적 전환기 이론(Thomson, 1930; Mason, 1997에서 재인용)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변화들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유아사망율을 줄여들게 했으며 따라서 가족크기가 커졌으므로 궁극적으로 자녀출산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서구와 아시아에서 종종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신고전주의적인 미시경제적 출산율이론(Caldwell, 1982; Mason, 1997에서 재인용)에서는 다른 소유물과 비교한 자녀의 상대적인 비용, 부부의 수입 및 다른 경쟁적인 소비와 비교한 자녀선호도 등 3가지 요인들이 부부의 출산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비용, 수입, 선호도가 변한다는 환경적 및 제도적 요인들을 간과함으로써 이론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이론은 다시 사회학적 요인인 ‘자녀의 공급’이라는 측면이 보완되었는데(Easterlin and Crimmins, 1985; Mason, 1997에서 재인용), 출산율은 부모들이 임신할 자녀의 공급, 부모들이 원하는 생존자녀수, 출산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금전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출산율 감

소에 대하여 유용한 관점으로 활용되었으나 역시 제도적 측면에 관한 설명을 간과함으로써 한계를 보여주었다.

출산을 감소에 관한 또다른 주요 이론은 이념적 관점에서 본 이념적 이론(Cleland and Wilson, Mason; 1997에서 재인용)이다. 이 이론에서는 출산을 감소가 피임에 관한 정보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규범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이론도 피임의 정보도 활용가능하고 많은 자녀수를 원하는 아프리카에서의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ason(1997)은 출산을 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외적 영향들(첫째 변수)은 이전에 존재한 상황(둘째 변수), 즉 사망률, 수용할 수 있는 생존자녀수, 출생전후 통제 비용에 상호 영향을 주며, 이 변수들은 주요 변화(셋째 변수), 즉 사망률 감소, 수용 가능한 생존 자녀수의 감소, 성별선호도 약화, 출생 후 통제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후자인 주요변화는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영향(넷째 변수)과 상호작용하면서 자녀생존, 자녀를 가지는 것의 비용과 혜택 및 출생 전 대비 출생 후 통제 비용에 대한 인식(perception, 다섯째 변수)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출산율로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이 이론들의 공통점은 출산을 감소에 관한 이유를 거시적인 국가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 점이다. 그러나 출산을 감소는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매우 복잡한 심리적, 정서적, 가족관계의 상호작용 등의 산물이다. 최근 연구 경향을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을 감소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 즉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과도한 자녀교육비, 출산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이혼율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 가족학적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e.g., Cooke, 2009; Nakonezny, Rodgers, Shaw, 2003; Torr and Short, 2004).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나타내었고 그 이후로도 그 추세는 지속적이다.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도 출산을 제고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저출산 극복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과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2조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산율 감소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서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의 3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 중에서 OECD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출산을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즉 남녀 간 취업평등과 취업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부담에 저해받지 않고 얼마나 일-가정 양립을 잘 할 수 있는지, 또한 가족내 부부관계의 양성평등 정도는 어떠한지가 출산을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보육환경 개선은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었다.

Cooke(2009)의 연구에서도 이탈리아의 경우 남편이 자녀양육을 분담할수록 취업한 기혼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졌다. 스페인에서는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직장일을 하는 시간이 길수록 출산율이 낮아졌지만 민간자녀보육시설 이용수월성은 이 현상을 현저하게 상쇄하였다.

결혼안정성과 출산율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 관계는 서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불안정하고 이혼이 많이 발생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졌으며(Cohen and Sweet, 1974; Fu, 1998; Lillard and Waite, 1993; Thornton, 1978), 미국의 무과실주의 이혼정책의 실행 이후 이혼이 증가한 34개 주에서는 그렇지 않은 16개 주에 비해서 출산율도 낮게 나타났다(Nakonezny, Rodgers and Shaw, 2003). Cohen과 Sweet(1974)는 전국적 규모의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혼한 여성들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였으나 재혼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출산율은 이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0.6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저출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Bongaarts(2003)는 57개 저개발국가들의 인구·건강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 전환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저출산의 저개발국에서 원하는 자녀수와 실제자녀수 사이에 차이가 적게 나타날 때에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적었고 이 차이가 클 때에는 교육수준의 차이도 증가하였다. 이 차이는 저개발국가들이 출산율에서의 전환이 끝날 때까지 현저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출산율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또다른 요인은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도입과 실시인데 가족친화적 정책이란 남녀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유계숙 외, 2007). 가족친화적인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정책 및 경영은 도입단계로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과 조직문화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가족친화문화 및 정책과 관련있는 것으로는 탄력근무제, 육아

및 출산휴가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가족생활 상담 등 다양한 근로자 지원제도 및 경제적 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정책, 특히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지만 정책실시의 효과성은 바로 측정이 되거나 명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 실시와 목표로 하는 효과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 전후를 비교한 종단적 및 횡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북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 실시 전후를 비교한 연구(Björklund, 2006)에서 스웨덴의 출산율은 가족정책 실시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자녀수, 자녀출산 나이, 자녀출산 간격 등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정책은 교육수준과 출산율간에 약한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자녀양육, 노인부양, 융통적인 근무시간 등은 출산율 하락을 이미 경험한 선진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원에서도 질 높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들이다(Baird and Whitehouse, 2006; Baird and Whitehouse, 2007에서 재인용; Whitehouse, Baird, Diamond, Hosking, 2006).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이룰 수 없는 기업환경은 수준 높은 근로자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책적으로 배려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Cramer과 Pearce(1990)는 일과 가족정책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당위성과 결과를 이미 20년 전에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및 가족내 양성평등 의식과 성역할태도, 결혼안정성을 나타내는 결혼만족도 수준, 자녀양육비, 보육환경, 가족친화적인 가족정책 등은 한 국가와 사회의 출산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요 가족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의 현황이 타 시도 혹은 전국과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더 추진되어야 할 가족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구조사(census)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현황에 대한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이혼통계결과’, 사회조사보고서 및 국가통계포털 사이트(www.kosis.kr) 등에서 출판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이는 통계분석이 가능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요인들의 경험적 검증도 비슷한 한계를 지닐 수 있으며, 인구조사에서 활용된 요인들의 범위한계를 본 연구에서 가지고 있으며 원자료가 아닌 발표된 인구조사 결과만을 활용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인과 관계보다는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 저출산율을 보여주는 부산광역시와 전국적 자료 및 타시도를 비교함으로써 저출산과 관련한 부산만의 고유한 사회적 및 가족학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정책들을 지향하여야 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회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부산의 출산율과 다음의 각 요인들, 즉 초혼연령, 혼인 및 이혼건수, 동거기간별 및 사유별 이혼, 혼인형태와 결혼안정성, 맞벌이 실태,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관한 견해 및 실태, 가족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가족친화적인 가족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개념인 가족친화정책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족친화정책은 남녀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서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 IV. 연구결과 및 토론

### 1. 부산여성의 혼인 및 만혼 현황

부산의 평균초혼연령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남편 31.48세와 처 28.88세에 이르렀으며 전국 평균초혼연령(남편 31.38세, 처 28.32세)보다도

&lt;표 2&gt; 평균초혼연령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남편	28.4	28.6	28.9	29.1	29.3	29.6	29.8	30.1	30.53	30.87	30.96	31.11	31.38
부인	25.5	25.7	26.1	26.3	26.5	26.8	27.0	27.3	27.52	27.72	27.79	28.09	28.32
부산													
남편	28.7	28.9	29.1	29.3	29.4	29.7	30.0	30.35	30.61	30.87	31.05	31.19	31.48
부인	25.8	26.1	26.3	26.6	26.7	27.0	27.6	27.60	27.90	28.14	28.40	28.64	28.88

자료: 통계청, 「2008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9

&lt;표 3&gt;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구분	전국			부산		
	혼인건수	조혼인율	합계출산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합계출산율
1999	362,673	7.7	1.42	25,495	6.7	1.20
2000	334,030	7.0	1.47	23,343	6.1	1.22
2001	320,063	6.7	1.30	21,825	5.8	1.09
2002	306,573	6.4	1.17	20,916	5.6	0.96
2003	304,932	6.3	1.20	20,027	5.4	1.00
2004	308,598	6.4	1.20	19,898	5.4	0.90
2005	314,304	6.5	1.13	18,973	5.2	0.91
2006	330,634	6.8	1.10	20,017	5.5	0.90
2007	343,559	7.0	1.30	21,484	6.0	1.00
2008	327,715	6.6	1.19	20,149	5.6	1.02

자료: 통계청, 「2008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9

만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1996년과 비교하여 남자는 2.78세, 여자는 3.08세가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런 추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취업율, 결혼관의 변화, 사회인식의 변화, 혼인결정에서 당사자 의견 중시와 관련된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는 저출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Bongaarts(2003)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되는 부분이다

부산의 최저출산율 <표 3>은 부산의 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부산의 혼인건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표 3> 참조). 연간 혼인건수는 2008년 20,149건으로 2000년에 비해서 6,315건이 줄어들었다. 인구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2000년 6.1건에 비해서 2008년 5.6건으로 줄었으며 2005년도에 5.2건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

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어서 낮은 출산율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부산의 저출산 현상 개선을 위해서는 결혼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인지적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결혼만족도, 이혼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 2. 부산의 이혼현황과 출산율

부산의 이혼건수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총 이혼건수는 12,065건으로 1994년도에 비하여 두 배가 되었고,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3.8명으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었다. 그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부산의 이혼율은 2008년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산의 높은 가족해체 현상은 2003년 기준 혼인 대비 이혼율의 경우 전국에서 인천광역시와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 (70.5%)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높은 이혼율은 낮은 출산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표 4>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구 분	전 국		부 산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1994	65,015	1.4	6.1	1.6
1995	8,279	1.5	6.2	1.6
1996	79,895	1.7	6,957	1.8
1997	91,159	2.0	8,211	2.1
1998	116,294	2.5	9,895	2.6
1999	117,449	2.5	9,666	2.5
2000	119,455	2.5	10,129	2.7
2001	134,608	2.8	10,489	2.8
2002	144,910	3.0	12,065	3.2
2003	166,617	3.4	14,120	3.8
2004	138,932	2.9	11,334	3.1
2005	128,035	2.6	9,905	2.7
2006	124,524	2.5	8,953	2.5
2007	124,072	2.5	8,677	2.4
2008	116,535	2.4	7,908	2.2

자료: 통계청, 「시도/인구동태건수」 2009

동거기간에 따른 부산의 이혼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율은 매년 상승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03년까지는 결혼 4년 이내의 이혼보다는 5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으며 신혼초기인 결혼 4년까지의 이혼율은 2008년까지도 여전히 전체 동거기간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준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혼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의 이혼 특징은 가족생활주기 중 빈둥지기에 해당하는 결혼경력 20년 이후의 부부들의 이혼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부가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시기가 되면 그동안 참고 살던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부산가족들의 결혼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기혼부부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들에 중점을 두고 가족생활주기 각 단계에 해당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주기별로 특화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관련 상담과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혼인율도 타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해체 현황을 볼 때 부산에서는 가족체계를 안정시키고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위해 더욱 요구된다.

<표 5> 동거기간별 이혼

(단위: 천 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8.9	128.0	124.5	124.1	116.5
0-4년	36.8	34.5	35.2	38.1	39.1	41.0	35.0	33.1	33.0	33.7	33.1
5-9년	28.0	26.9	26.7	31.1	33.8	38.6	31.8	28.5	27.3	25.5	21.7
10-14년	22.7	22.3	22.4	25.7	28.2	32.8	26.3	23.6	22.4	21.7	18.3
15-19년	18.2	18.4	18.4	20.0	21.4	24.9	20.5	18.9	18.0	18.3	16.5
20년 이상	10.8	16.0	17.2	20.1	22.8	29.8	25.4	23.9	23.8	25.0	26.9
부산	9.9	9.7	10.1	10.5	12.1	14.1	11.3	9.9	9.0	8.7	7.9
0-4년	2.8	2.7	2.6	2.8	2.8	3.0	2.6	2.3	2.1	2.0	2.0
5-9년	2.1	2.1	2.2	2.3	2.6	3.1	2.4	1.8	1.7	1.8	1.4
10-14년	1.9	1.7	1.9	1.9	2.3	2.7	2.1	1.7	1.7	1.5	1.2
15-19년	1.7	1.6	1.7	1.7	2.0	2.2	1.7	1.4	1.4	1.3	1.2
20년 이상	1.5	1.5	1.8	1.9	2.4	3.2	2.5	2.2	2.0	2.0	2.1

자료: 통계청, 「2008년 이혼통계 결과」 2009

다음으로 사유별 이혼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부산 이혼부부들의 가장 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이며 가족 간 불화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부정과 정신적, 육체적 학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 문제는 2003년에 그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6> 참조). 이혼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침과 방법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운용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용될 경우 이혼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거나 이혼까지 가기 전에 예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표 6> 사유별 이혼구성

(단위: 건)

연도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상	기타	미상
2000	9,736	5,210	26,269	12,793	48,157	1,054	15,571	1,192
2001	11,781	6,309	23,795	15,617	58,069	975	17,121	1,347
2002	12,560	6,947	20,887	19,727	65,001	924	17,898	1,390
2003	12,287	7,163	21,735	27,354	75,706	1,025	19,940	1,886
2004	9,692	5,850	13,958	20,472	68,704	888	16,873	2,495
2005	9,708	5,706	12,159	19,105	63,028	803	15,448	2,078
2006	9,434	5,637	11,092	18,277	62,004	953	14,872	2,255
2007	9,658	5,956	9,982	16,946	58,229	913	18,779	3,609
2008	9,430	5,882	8,977	16,565	55,649	750	17,278	2,004
2000	722	489	1,898	1,061	4,711	91	1,143	14
2001	588	392	2,385	1,252	4,319	108	1,427	18
2002	816	459	2,481	1,698	4,646	89	1,836	40
2003	766	528	3,247	2,557	4,493	111	2,294	124
2004	724	481	1,142	1,712	5,367	95	1,590	223
2005	722	407	831	1,470	5,037	78	1,205	155
2006	632	412	738	1,348	4,737	75	885	126
2007	688	490	643	1,309	3,980	83	1,216	268
2008	654	421	676	1,359	3,725	73	947	53

자료: 통계청, 「2008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2009

<표 7> 재판종류별 이혼

(단위: 천 건)

		199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전체	59.3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협의이혼	43.9	97.6	98.9	100.2	111.7	121.9	143.6
	재판이혼	11.6	19.1	18.9	19.2	22.6	22.7	22.3
부산	전체	5.9	9.9	9.7	10.1	10.5	12.1	14.1
	협의이혼	4.4	8.2	8.0	8.4	8.8	10.1	12.0
	재판이혼	1.1	1.7	1.7	1.7	1.7	1.9	2.1

자료: 통계청, 「2003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2004

이혼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협의이혼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003년 부산의 이혼을 종류별로 보면 협의이혼이 4.4천 건, 재판이혼이 1.1천 건으로 나타나 이혼이 대부분 협의이혼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판이혼은 1993년 19.6%에서 2003년 13.4%로 감소하였다. 부산의 이혼은 2003년에 14.1천 건으로서 1993년 5.9천 건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고 대부분 재판이혼(15%)보다 협의이혼(85%)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이혼은 1993년 19.1%에서 2003년 15.0%로 감소한 반면에 협의이혼은 1993년 75.1%에서 2003년 84.8%로 증가하였다.

### 3.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와 결혼안정성

부산여성의 혼인 형태를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혼은 이혼 후 재혼의 비율이 89.3%로서 전국평균을 (89.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재혼의 경우 대다수가 이혼 후 재혼이라는 점에서 혼합가족에 관한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산의 혼인형태별 구성을 보면(<표 9> 참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부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었다. 특히 부인이 이혼 후 재혼이며 남편이 초혼인 경우(1,017)가 부인 초혼-남편 이혼 후 재혼(686)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결혼가치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혼은 남녀 모두에게서 사별 후 재혼보다는 이혼 후 재혼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부산의 재혼가족 평균 연령을 보면(<표 10> 참조), 전국적인

<표 8> 부인의 혼인종류별 분포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전체	334,030	320,063	306,573	304,932
초혼	284,742	266,382	253,019	247,614
전  재혼	48,324	52,543	52,595	55,791
국  사별후 재혼	5,514	5,923	5,528	6,055
이혼후 재혼	42,810	46,620	47,067	49,736
미상	964	1,138	959	1,527
부  전체	23,343	21,825	20,916	20,027
초혼	19,672	18,053	16,902	16,044
부  재혼	3,668	3,766	3,999	3,937
산  사별후 재혼	359	426	395	420
이혼후 재혼	3,309	3,340	3,603	3,517
미상	3	6	15	4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혼인, 이혼편) 2003

<표 9> 부산광역시 혼인형태별 혼인구성

(단위: 건)

	부인의 혼인종류	초혼	재혼	사별후 재혼	이혼후 재혼	미상
남편의 혼인종류	20,027	16,044	3,937	420	3,517	46
초혼	16,409	15,292	1,114	97	1,017	3
재혼	3,576	748	2,819	322	2,497	9
사별후 재혼	281	62	217	86	131	2
이혼후 재혼	3,295	686	2,602	236	2,366	7
미상	42	4	4	1	3	3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혼인, 이혼편) 2003.

<표 10> 평균 재혼 연령

구분	전 국		부 산	
	남편	부인	남편	부인
1994	39.7	35.0	39.4	35.4
1995	40.4	35.6	40.4	35.8
1996	40.2	35.5	40.6	35.6
1997	40.5	36.0	40.8	36.4
1998	41.6	36.9	42.0	37.7
1999	42.2	37.5	42.2	38.2
2000	42.1	37.5	42.1	38.3
2001	42.1	37.6	42.1	38.6
2002	42.2	37.9	42.2	39.0
2003	42.8	38.3	42.8	39.0
2004	43.8	39.2	44.1	39.8
2005	44.1	39.6	44.8	40.1
2006	44.4	39.7	44.9	40.7
2007	44.8	40.1	45.5	41.3
2008	45.0	40.3	45.4	41.3

자료: 통계청, 「시도/인구동태건수」 2009

추세와 함께 재혼연령이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평균 연령은 2008년에 남편 45.4세, 부인은 41.3세로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혼기간이 긴 중년기 결혼의 해체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며, 이혼이 가족생활주기 전체 주기로 확대된 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부산의 맞벌이 실태

부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주요 광역시도 중에서도 최하위(2008년, 46.9%)를 나타낸다(〈표 11〉 참조). 이것은 부산지역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 지역 경제상황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같은 양상을 보여 준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부산의 여성들은 타 지역 여성들보다 경제활동에 적게 참여하면서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간의 관계보다 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혼해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자녀출산을 꺼려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다. 지역 경제상황이 바뀌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효율을 생각할 때에는 보다 쉬운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가족생활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5.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견해

부산에 사는 여성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 거주 여성들과 비교하여 결혼에 관하여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표 12〉 참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부산여성들의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산 남성들도 전국 평균이나 서울에 비하여 낮았지만 여성들보다는 그 차이가 적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부산의 맞벌이 실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출산율에 부정적 결과를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부산

〈표 11〉 시도별 여성경제활동 비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서울특별시	48.8	49.6	49.7	50.0	51.6	52.0	51.9	51.7	51.0
부산광역시	47.5	47.5	49.0	45.4	46.1	46.9	47.1	47.5	46.9
대구광역시	47.4	48.9	49.9	49.1	50.2	50.8	49.8	48.9	47.4
인천광역시	46.5	47.6	48.5	47.3	48.3	47.1	47.9	48.8	48.4
광주광역시	45.8	47.4	49.4	46.3	47.5	48.5	48.2	48.7	48.0
경기도	47.4	47.5	47.5	46.8	48.5	48.7	49.3	49.2	49.6
충청북도	49.0	48.2	49.2	47.0	48.0	48.4	49.0	48.9	49.2

자료: 통계청

<표 12>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결혼			이혼			
		해야한다 <sup>1)</sup>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한다 <sup>2)</sup>	해서는 안된다 <sup>3)</sup>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2002	100.0	69.1	27.2	1.9	58.4	32.9	6.6	
2006	100.0	67.7	27.5	2.2	59.9	29.4	6.8	
2008	100.0	68.0	27.7	2.9	58.6	31.9	7.1	
전국	남자	100.0	74.6	21.9	2.2	63.8	27.8	5.7
	여자	100.0	61.6	33.3	3.6	53.7	35.8	8.3
서울	남자	98.6 *	73.6	22.8	2.2			
	여자	98.7 *	62.7	33.3	2.7			
부산	남자	98.1 *	73.1	22.1	2.9			
	여자	98.1 *	57.9	35.7	4.5			
미혼 남자	100.0	64.8	30.0	2.8	48.2	38.4	8.2	
미혼 여자	100.0	46.5	46.8	4.0	31.1	50.3	14.1	
15-19세	100.0	53.6	39.0	3.4	40.0	42.4	10.6	
20-29세	100.0	61.9	33.8	3.0	43.3	43.5	10.0	
30-39세	100.0	60.8	34.9	3.2	50.6	40.4	7.1	
40-49세	100.0	65.3	30.2	3.4	58.9	32.5	7.1	
50-59세	100.0	76.6	20.0	2.5	68.9	23.3	6.2	
60세이상	100.0	84.5	12.0	2.1	81.9	12.9	3.4	

주: 1) '해야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2)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3) '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를 합한 수치임  
 4) \* '잘 모르겠다'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09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며, 아이도 가장 적게 낳는 등 출산율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적 지표를 나타낸다.

## 6. 가사분담에 관한 견해 및 실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를 보면(<표 13> 참조), 부인이 주도한다는 대답이 부산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산의 남성들과 서울 남성들의 2006년 자료를 보면, 부산의 남성들이 서울보다 확연하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3.5% vs. 68.9%).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항목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분담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면(〈표 14〉 참조), 부산의 남성과 여성들은 서울지역과 전국의 부부들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즉 가사일은 '부인이 주도'하거나 '부인이 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서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것은 양성평등의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부산의 부부들은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이라는 응답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들이 42.7%에 이르러 특히 남성들의 성역할태도가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윤경자, 1997)에서는 기혼부부들 중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부인보다 보수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산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남편들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사노동, 맞벌이, 육아, 보수적 성역할 태도 및 행동 등 가족 내 다양한 불평등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다시 부산의 높은 이혼율과 최저출산의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은 그 감내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산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양성평등의 가치 및 문화 확산, 보육시설 지원과 가족 내 가족구성원

〈표 13〉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단위: %)

	계	부인 주도	부인 전적 책임	부인 주로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 주도	남편 주로 분담	남편 전적 책임
2002(전국)	100.0	65.9	7.2	58.7	30.7	3.3	2.8	0.5
2002(부산)	100.0	66.7	6.9	59.8	30.2	3.1	2.6	0.5
2006(전국)	100.0	65.4	5.9	59.4	32.4	2.3	1.9	0.3
남자	100.0	71.3	8.0	63.3	26.1	2.6	2.2	0.4
여자	100.0	59.7	3.9	55.8	38.4	1.9	1.6	0.3
2008(전국)	100.0	66.5	6.7	59.8	32.4	1.1	0.9	0.2
남자	100.0	71.8	9.1	62.7	27.0	1.2	1.0	0.2
여자	100.0	61.5	4.5	57.0	37.5	1.0	0.8	0.2
2006(서울)								
남자	100.0	68.9	7.1	61.8	28.4	2.7	2.4	0.3
여자	100.0	55.0	2.9	52.1	42.9	2.1	1.8	0.4
2006(부산)								
남자	100.0	73.5	9.1	64.5	24.1	2.3	1.9	0.4
여자	100.0	64.4	4.1	60.4	34.0	1.6	1.2	0.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표 14>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함께 살고 있는 부부)

(단위: %)

	계	부인 주도	부인 전적 책임	부인 주로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 주도	남편 주로 분담	남편 전적 책임
2006(전국)								
남편	100.0	89.5	31.9	57.6	7.5	2.9	2.4	0.6
부인	100.0	89.7	36.5	53.2	7.9	2.3	1.9	0.4
2008(전국)								
남편	100.0	89.4	33.4	56.0	8.7	1.9	1.4	0.4
부인	100.0	89.5	35.7	53.8	9.0	1.5	1.2	0.3
2008(서울)								
남편	100.0	86.8	26.0	60.8	11.8	1.4	1.2	0.2
부인	100.0	87.3	28.0	59.3	11.5	1.2	1.0	0.2
2008(부산)								
남편	100.0	90.5	36.6	53.9	7.6	1.8	1.6	0.2
부인	100.0	91.4	37.0	54.4	7.2	1.4	1.0	0.4

주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과 '부인'만 응답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09.

의 지원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맞벌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혼자 져야하는 가족문화는 여성의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휴가와 고용문제와 함께 가족구성원과 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산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산지역에서의 가족가치 및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7.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표 15> 참조),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전반에 걸친 만족도와 세부적인 영역에서의 만족도는 2006년보다 2008년에는 향상이 되었다. 그 중 2008년 배우자와의 만족도를 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부산의 부부들은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배우자 만족도는 남성들의 배우자 만족도에 비하여 전국평균보다 '만족'영역에서 7% 포인트가 더 낮은 수준이었고, 여성들은 불만 수준도 전국평균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다른 지표들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부산의 이혼율이 매우 높으며, 부부 양성평등의식이 매우 낮고,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매우 보수적이며, 맞벌이를 할 때조차 부인이 가사일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부산의 가족문화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저하로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lt;표 15&gt; 가족관계 만족도 (전국)

(단위: %)

	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배우자와의 관계	100.0	60.7	34.6	26.1	31.8	7.5	5.2	2.3
자녀와의 관계	100.0	69.1	39.1	30.0	26.6	4.3	3.6	0.7
2002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61.0	32.7	28.4	34.4	4.6	3.7	0.9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100.0	48.7	25.0	23.6	42.6	8.7	6.6	2.1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51.9	24.3	27.6	42.1	6.1	4.4	1.6
가족생활전반	100.0	50.4	22.9	27.4	40.7	8.9	7.2	1.7
배우자와의 관계	100.0	57.3	29.6	27.7	33.0	9.7	6.8	2.9
자녀와의 관계	100.0	65.7	33.7	31.9	29.2	5.1	4.3	0.9
2006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57.0	27.3	29.6	37.4	5.6	4.5	1.1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100.0	47.6	23.0	24.5	43.5	9.0	6.3	2.7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48.2	21.1	27.1	45.2	6.5	5.2	1.3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39.7	17.2	22.5	50.4	9.9	7.4	2.5
가족생활전반	100.0	56.1	18.6	37.5	39.8	4.1	3.5	0.6
배우자와의 관계(남자)	100.0	70.6	33.8	36.8	25.6	3.8	2.8	1.0
(여자)	100.0	60.8	23.7	37.0	30.3	8.9	6.5	2.4
배우자와의 관계(부산남자)	100.0	67.1	30.9	36.2	29.5	3.4	2.4	0.9
(부산여자)	100.0	53.8	20.4	33.4	35.6	10.5	7.9	2.6
2008 자녀와의 관계	100.0	72.7	34.6	38.1	23.8	3.5	3.0	0.6
자기부모와의 관계	100.0	64.5	26.6	37.9	31.1	4.4	3.6	0.8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100.0	52.5	20.2	32.2	39.8	7.8	5.9	1.9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53.0	19.0	34.0	41.3	5.7	4.6	1.1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43.8	14.6	29.2	47.4	8.8	7.0	1.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2009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관습이 유지되는 부산의 문화, 보수적 성역할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불만, 맞벌이를 해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가사노동 부담,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부산 부부들의 결혼 및 가족관계 만족도, 특히 여성들은 불만족의 수준이 더 높아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이혼율을 보이는 것 등 현실제약의 복합적인 인식이 부산의 사회적 외적 환경인 경제침체 등과 맞물려 최저 출산율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부산 여성인구의 현황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은 전국 최저의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 인구고령화 현상, 여성들의 가장 낮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높은 가사

노동 부담과 책임, 불평등한 성인지적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불평등, 성별 결혼 만족도 차이,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 저하 등이 총체적으로 어울려서 결혼에 대한 전국 최고의 부정적 생각과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이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즉 가사일과 육아의 주요 책임이 여성들에게 지워져서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과 가사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출산과 직장의 양자택일 문화와 사회구조, 결혼에 대한 달라진 여성들의 인식, 남성 권위중심의 가족문화, 이혼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산시의 초저출산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현황을 통해서 부산의 여성들은 불평등한 성인지적 사회 분위기에서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남편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며 자녀양육부담의 증가와 가사노동의 불평등 등으로 생활이 고단하다고 느끼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여성의 개인적 특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결혼을 미루거나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 등에는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으로 다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남편들만의 기대에 그치고 있으며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으로 서로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본 연구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 요인들 중에서 가족학적 요인들과 관련된 가족친화적인 정책과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산시의 저출산 향상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 제안 1: 만혼과 결혼기피 문화를 위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무엇보다도 먼저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은 사회체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의미있고 비중있는 변수이며 이혼자의 대다수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직업과 같이 하나의 선택이자 대안으로 여겨지는 등 결혼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지기는 했으나 결혼한 사람과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포함)간에는 결혼이라는 변수만으로도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먼저 기혼자들은 독신자들보다 장수한다(Lillard and Waite, 1995). 이 차이는 남성들에게서 더욱 뚜렷하였다. 일반적으로 기혼, 사별, 이혼, 결혼경험이 없는 독신의 순으로 수명이 짧았으며 남성들은 그 차이가 매우 현저하였다. 기혼자들은 또한 음주와 흡연 등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더 잘

관리하며(Elstad, Dahl, and Hofoss, 2006; Umberson, 1992), 주관적 안녕 상태가 높으며(Mastekassa, 1992; Williams, 2003), 정서적 만족감도 높다. 기혼자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었고 수입도 높았다(Shek, 1995; Williams, 2003).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한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가 있을 때보다 학업 성취도, 학교 중도탈락, 정서적 안정감, 위기행동에의 개입, 범죄율, 성행동 관여, 정서적 안정감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가난도 적게 경험하였다(Amato and Keith, 1991; Ermisch and Francesconi, 2001; Imamura et al., 2007; Morrison, and Cherlin, 1995; Sun and Li, 2001; Wojtkiewicz, 1993).

미혼들이 만혼을 피하고 결혼을 중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에서 더 양성평등적인 문화와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혼=고생길'이라는 등식에서는 결혼기피는 더 심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 제안 2: 가족친화적인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화 조성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의식이 달라졌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여성들이 가정에 에너지와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사일과 양육, 직장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우리사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으며 부산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임이 더 과중하다. 이것이 여성들의 문제로만 남아 있는 한 출산율은 더욱 줄어든 것이며 이혼율은 높아질 것이다.

성인 남성 중심의 비용통적인 직장문화는 여성들의 직장 진입을 막고 이미 진출한 여성들에게는 직장가정 중 양자택일을 하게 만들어서 기존 제도권의 여성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해서 가임기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며 끝내 단념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25-35세 사이의 출산적령기 여성들에게 탄력적 근무시간과 full-time work로의 복귀가 가능한 part-time work 등이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의 확산을 방지할 것이다. Part-time work 여성들은 가사일과 양육을 위해 full-time work보다 part-time work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Del Boca, 2002).

#### 제안 3: 양성평등을 위한 부산의 가족환경 변화

부산시의 시정 방향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천적 전략은 무엇인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부산의 여성들은 전국 평균보다도 행복하지 않다.

가족내 성차별적 문화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임기 여성들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녀로서 과거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양성평등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결혼 후 상응하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많은 책임과 양육 및 노인부양을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혼자 맡으려고 하지 않으며 높은 이혼율로 이어질 수 있다. 결혼 전까지 남성들과 대등한 교육을 받으며 높은 성취를 경험한 여성들은 결혼 후 이중부담을 겪게 된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정체감을 가진 채 가정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동시에 긴 가사노동과 양육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중역할을 경험하면서 저출산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제안 4: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이 기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과 같은 값비싼 제도는 시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들을 시상·홍보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민들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을 고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육아수당, 육아휴직 보장과 육아휴직 후 직장에서의 복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정도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원 연수 및 교육에 가족가치를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제안 5: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이용 수월성

최근 몇 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부산의 보육시설은 그 수와 질이 과거보다도 향상되었다. 수요자가 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인증제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직장 탁아시설의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직장퇴근시간과 맞지 않는 보육시설의 이용시간과 영아의 경우 맡길 곳이 적어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사의 질에 대한 신뢰 등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도우미 확충,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를 위한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부산광역시 기초단체 구별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자들이 홍보부족으로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좋은 서비스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제안 6: 간과된 문제점인 인공유산 방지 방안과 캠페인

출산율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기혼 및 미혼여성들의 인공유산이다. 인공유산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하여 여성들이 별다른 제재없이 인공유산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생명존중운동과 미혼모가 낳은 아이라도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입양 등을 통하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생건수는 49만여 건이지만 한해 임신중절 건수는 이것의 2배에서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의 출생아수는 2007년보다 약 27000명 정도 줄었으나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라지는 아기가 더 많은 현상은 방치되고 있다. 인공유산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현황이다.

인공유산은 적은 혜택과 많은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인공유산을 하는 당시의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불임, 자궁유착, 습관적 자연유산, 심리적 스트레스, 윤리문제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유산이 불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 집계가 되지 않는데, 한해 인공유산으로 인해 태어나지 않는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자료(2008)에서는 기혼여성들의 임신중절률도 20-24세인 경우 59%에 이르며 20-44세는 평균 34%에 달한다. 이것은 1997년 44%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 제안 7: 과도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여 결혼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과도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보육비, 사교육비 비용이 높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는 공·사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도 부모들의 자식 뒷바라지가 계속되어 결혼비용과 주택구입비 지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경향닷컴에서 재인용, 2007.11.13)에서 부

모들의 27%는 '혼인할 때까지'로 대답하였고, '취업할 때까지(11.9%)'와 '언제(까지)라도(5.5%)'라고 대답한 부모도 20%에 달했다. '대학 졸업 때까지(46.3%)'라는 응답한 부모들을 포함하면 부모들의 일생은 자녀를 출산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부모됨의 고비용 구조'하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부모가 되더라도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려고 한다.

#### 제안 8: 저출산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의 확고한 시행

대중들의 인식 변화와 병행하여 확고하게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가족정책 부분이다. 다만 가족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부분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럼에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행되어야 할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확대와 이중과세와 결혼지위에 따른 면세 제외와 같은 불평등 해소,
- 비동일 주민등록거주 부모 부양 인정,
- 가족수당 확대,
- 다자녀 가족 가족수당 지급,
- 육아휴직의 철저한 시행과 급여지급을 증대,
-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탄력적 근무시간 시행 확대,
- 직장탁아시설 설치 확대,
- 영아(0-2세)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 확대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이미 20년 전에 시작되었으나 전문가들의 관심을 떠나서 일반인들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최근 수년의 일이다. 가족문제는 오랫동안 '가족'의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문제가 가족만의 은밀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족, 특히 여성의 몫이 되어야 한다면 저출산과 같은 문제는 미래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도 사회의 구조와 문화, 신념, 의식 등 심층적 접근과 세부적 방법론적인 전략적 접근을 모두 필요로 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육아휴직과 수당 등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등도 출산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중대한 변

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구의 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나은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어도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난다. 잠재적인 사회적 배경처럼 여겨져서 서로 상관관계가 낮을 것같은 문제들이 의외로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학력의 능력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고령화사회에서 생산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출산과 가족, 결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 변화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카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잘 활용된다면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경향닷컴 “자녀양육 언제까지? 46% ‘대학졸업’ 27% ‘결혼까지’” 2007년 11월 13일자.
- 삼성경제연구소 (2006)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CEO Information, 557.
- 유계숙·정혜정·전혜정·김윤정·민성혜·박은미·안재희·장보현·한지숙 (2007)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 윤경자 (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_\_\_\_\_ (199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동의논집》 28: 721-740.
- 통계청 (2000) 《2000년 시도별·성별·연령별 총조사인구》.
- \_\_\_\_\_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 \_\_\_\_\_ (2003)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혼인, 이혼편)》 통계청.
- \_\_\_\_\_ (2004)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통계청.
- \_\_\_\_\_ (2008)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온라인)》 통계청.
- \_\_\_\_\_ (2009) 《2008년 사회조사통계》 통계청.
- 한국일보 “한국 출산율 2년째 꼴찌: 평균 1.2명-기대수명은 79세” 2009년 5월 22일자.
- Amato, P. R., and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Baird, M. and Whitehouse, G. (2007) "Taking Care: Work and Family Policy Issues for Australia" *Austradian Bulletin of Labour* 33(2): 129-133.
- Bongaarts, J. (2003) "Completing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ing World: The Role of Educational Differences and Fertility Preferences" *Population Studies* 57(3): 321-335.
- Björklund, A. (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 3-24.
- Cohen, S. B. and Sweet, J. A. (1974) "The Impact of Marital Disruption and Remarriage on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1): 87-96.
- Cooke, L. P. (2009) "Gener Equity and Fertility in Italy and Spain" *Journal of Social Policy* 38(1): 123-140.
- Cramer, K. and Pearce, J. (1990) "Work and Family Policies become Productivity Tools" *Management Review* 79(11): 42-44.
- Del Boca, D. (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Population Economics* 15: 549-573.
- Elstad, J. I., Dahl, E. and Hofoss, D. (2006) "Associations between Relative Income and Mortality in Norway: a Register-Cased Study"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6(6): 640-644.
- Emisch, J. and Francesconi, M. (200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Achievements" *Population Economics* 14(2): 249-270.
- Fu, X. (1988) "A Longitudinal and Cross-Cultural Analysis of Fertility Declin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8: 207-226.
- Imamura, M., Tucker, J., Hannaford, P., da Silva, M. O., Astin, M., Wyness, L., Bloemenkamp, K., Jahn, A., Karro, H., Olsen, J. and Tenmerman, M.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Teenage Pregnancy in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7(6): 630-636.
- Lillard, L. A. and Waite, L. J. (1995) "Til Death do us Part: Marital Disruption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1131-1156.
- Mason, K. P. (1997) "Explaining Fertility Transitions" *Demography* 34(4): 443-454.
- Mastekaasa, A. (1992) "Marri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me Evidence on Selection into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901-911.
- Morrison, D. R. and Cherlin, A. J. (1995) "The Divorce Process and Young

- Children's Well-Being: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800-812.
- Nakonezny, P. A., Rodgers, J. L., Shaw, K. (2003) "Did Births Decline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Enactment of No-fault Divorce Law?" *Social Biology* 50(3-4): 188-200.
- Sun, Y. and Li, Y. (2001) "Marital Disruption, Parental Invest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Family Issues* 22(1): 27-62.
- Thornton, A. (1978) "Marital Dissolution, Remarriage, and Childbearing" *Demography* 15(3): 361-380.
- Torr, B. M. and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 Umberson, D. (1992)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Social Control of Behavior" *Social Science & Medicine* 34: 907-917.
- Whitehouse, G., Baird, M., Diamond, C. and Hosking, A. (2006) *The Parental Leave in Australia Survey: November 2006 Report*, <http://www.uq.edu.au/polsis/parental-leave/level1-report.pdf>.
- Williams, K. (2003) "Has the Future of Marriage Arrived? a Contemporary Examination of Gender, Marri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4): 470-487.
- Wojtkiewicz, R. A. (1993) "Simplicity and Complexity in the Effects of Parental Structure on High School Graduation" *Demography* 30(4): 701-716.

## **Factors associated with Lowest Low Fertility and Strategies for the Policy of Family-friendly Environments for Fertility Increase in Busan Metropolitan City**

*Gyung Ja Yoon*

This study examines how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persistent very low fertility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contemplates family-friendly environments and social strategies for fertility increase. Fertility decline in Busan Metropolitan City recorded the lowest birth rate nationwide recent years among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Birthrates are low partly because of multiple factors such as high age at childbearing and at marriage, decline in marriage, high divorce rate, the phenomena of marriage avoidance among unmarried women,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of men, low domestic work participation of husbands among dual career couples, low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abortion, and more broader attributes such as family policy, availability of childcare, education expenses, and family-friendliness of a society. In addition, women of dual career couples in Busan strained from domestic work overload under traditional norms of gender role, and marital satisfaction recorded below average nationwide along with especially low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compared to that of husbands. Major aspects of implications and considerations for higher birth rate and family friendly policy in Busan are discussed.

**Key Words:** Fertility, Gender equity, Birthrate, Gender role attitude, Family policy